

U대회 선수촌아파트 '입주 대란' 우려

〈화정 주공 재건축아파트〉

추가분담금 놓고 전 집행부·시공사와 새 집행부 입장차 내달초 입주 앞두고 26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주목 조합원 등 총 3726세대 발 묶일 뎀 연쇄 이사대란 파장

광주 최대 규모 재건축아파트인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달 7일로 입주가 조망기에 돌입했지만 준공검사, 조합원 총회(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 남아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주축인 조합의 신·구 집행부와 시공사 등 3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약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조합원 2755세대를 비롯해 총 3726세대가 제 때 이동하지 못하게 돼 2차·3차 이사 대란 등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입주 전 절차로는 준공검사,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등을 남겨두고 있다. 준공검사는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이후 시공사 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관청(구정)이 설계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관

계법령에 어긋남은 없는지 등을 검사하는 일이다.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3일, 늦어지더라도 1~2주일이 소요된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 구 집행부 측의 비협조로 준공검사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구 집행부 모두 준공검사 지연이 입주 대란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다. 총회는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364억원 추가되자 이를 조합원 세대별로 800만~1500만원을 분담할 것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다.

지난 19일 총회 끝에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것도 이 추가분담금이 발단이었던 것이다. 신임 집행부 측은 구 집행부가 산정한 364억원의 추가사업비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집행부 측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26일 총회를 통한 추가분담금 확정 없이는 준공검사는 물론 입주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등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아파트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유지권행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총회를 열어 추가분담비를 확정해 입주를 마무리 지은 후 비용에 관해 손해가 있다면 협상 또는 소송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다.

구 집행부 측도 신임 집행부가 구정의 승인을 얻어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추가분담비가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신임 집행부 측은 '신 입주, 후 총회'를 고수하고 있다. 7000억원을 웃도는 재건축 사업비 중 불과 364억원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해서 시공사 측 의무인 준공검사를 게을리하고 입주를 지연시키는 것은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2011년 분양가(평당 690만~710만원)보다 평균 2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점, 소송을 통해 U대회 임대료가 산정되면 이를 사업비에 반영해 추가 분담금이 낮아진다는 점과는 별개로, 조합이 꼭 부담할 비용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신임 집행부 측은 추가분담비용 364억원 중 상당액은 부풀려졌거나 시공사 부담 비용이며 실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여원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준공검사, 관리처분 계획변경 총회를 통해 추가분담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도 "다만, 조합원 중 추가분담비 지급 용의가 있는 세대에 한해서는 별도 협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마저 신임 조합장은 "집행부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추가분담분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커서 26일 총회가 개최되거나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입주 지연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일부 입주 지연은 몰라도 입주 대란은 없도록 시공사, 전임 집행부와 협상에 임하는 만큼 믿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교육자치 훼손하는 탄압 중단"

전국 교육감들 촉구...교육부장관에 간담회 제안도

전국의 교육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자치 의 근간을 훼손하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치졸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자치를 존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누리고 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30일 개최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누리고 정으로 인한 보육대란

현실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 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청들에 대한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또 "교육부가 누리과정·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억대 채무에 잠적했던 요양병원장 구속

병원 운영비와 임금을 체불한 채 수개월 잠적했던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장이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청은 21일 병원 운영과 관련된 수십억원 규모의 채무를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광산구 신촌동 S 요양병원 대표회장 최모(4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식자재 공급권을 독점으로 주겠다"며 병원 구내식당 보증금 5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채권자 8명에게 13억원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다. 병원 직원 30여명의 급여와 퇴직금 등 9억원을 지급하

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앞서 2010년 전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처리된 이후 재기를 노리고 2013년 6월 100병상 규모로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병원 운영이 잠시 활기를 보이자 최씨는 지난해 3월 병원 규모를 2배로 늘렸고 그 뒤 경영난이 찾아와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하게 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최씨의 잠적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230여명에 달하는 병원 입원 환자들이 인근 병원에 분산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물대포 증태' 백남기씨측 경찰·국가 상대 손해소 내기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위중한 상황에 놓인 백남기(70)씨 측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소송 제기 사실과 경찰 공권력 남용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 마땅히 책임지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국회에서 경찰청장이 법률적 책임을 부인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 /연합뉴스

"자살 암시 집 나간 아내 찾아줘" ...경찰에 다짜고짜 주먹질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아내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민모(39)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께 광주시 북구 오지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살의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47) 경사 등 2명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것.

○...민씨는 이날 전화로 다투던 아내(40)가 '죽어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기자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달라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다행히도 민씨의 아내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묘목 받으러 웃음꽃 피네. 식목일(4월 5일)을 보름 앞둔 21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서 묘목을 받아든 시민들이 활짝 웃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감, 매화, 살구나무 4500주와 로즈메리 등 꽃 3000본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없는 郡' 신안 섬에 법정 설치

郡·목포지원 24일 협약식

군 법원이 없는 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신안군과 오진군 두 곳뿐이다. 이들 섬 주민은 법원이 없어 배를 타고 나가 또다시 배를 이용, 다른 지역에 설치된 법원에서 크고 작은 각종 재판 받는다.

신안군 주민들의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해 3~6시간 이상 걸려 목포지원으로 가야 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안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오는 24일 '신안 섬소리 법정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한다. 이번 협약은 사법 소외지역인 신안 섬마

을 주민의 사법 접근성 확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포지원의 제의로 이뤄졌다. 법원은 협약 후 다음달 말부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민·가사소송, 가족관계등록비용(개명 등) 및 조정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명과 나이 정정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즉석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안좌면, 비금면, 하의도면에서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 예정이다.

목포지원 관계자는 21일 "전담 재판부는 판사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해 소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기존 군 법원 업무 이외에도 지역 내 토지 분쟁이나 현장 검증 등이 필요한 민사단독사건, 가사소송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목포지원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섬김과 소통, 이해를 위한 법정이라는 뜻으로 '신안 섬소리 법정'으로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